

낙태죄 유지 입법예고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다

낙태죄 폐지하라

관련 기사 2면



재정준칙 발표
건축재정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3면

낙태죄 유지 입법예고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다

2면

연평도 피격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4~5면

미국 대선과
반나치 투쟁

7, 12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국으로 치닫는
유럽 경제

8면

논쟁
전공의는
중간계급인가

10~11면

태국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태국 반독재 투쟁

6면

낙태죄 존치 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다

전주현

[편집자 주] 본지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인 2017년부터 이미 정부가 낙태죄 폐지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며 낙태죄를 유지하려 드는 것을 비판해 왔다(노동자 연대) 229호 기사 '낙태죄 없애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를 참고하시오. 집권 3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 결국 낙태죄 존치를 추진하며 낙태죄 폐지 염원을 배신하고 있다.

오늘(10월 7일) 문재인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남겨 두고 낙태 허용 범위만 일부 확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를 기간과 사유에 따라 허용한다.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조건 없이 허용되지만, 임신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때 국가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임신 24주 이후 낙태는 지금처럼 금지된다. 형법상 낙태죄가 유지되므로 불법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는 처벌 대상이 된다.

'성평등 정부'가 되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는 대중의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했다. "도로 낙태죄" 개정안에 여성대중의 실망과 공분이 커지고 있다.

낙태를 여전히 "범죄"로 규정한 채 기간과 사유에 따라 처벌을 면제하는 정부안은 기만적이다. 낙태죄가 유지되면 낙태에 대한 낙인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법 개정 뒤 낙태 단속이 강화되면 처벌받는 여성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기간과 사유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자의적이다. 여성이 14주 이내에 임신을 자각하고 낙태를 준비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임신 과정을 잘 모르는 청소년이나 생리가 불규칙한 여성들은 임신을 뒤늦게 자각할 수 있다.

물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여성들은 가급적 빨리 낙태를 하려고 한다. 낙태의 95퍼센트는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진다. 그러나 여러 조건과 나름의 사정 때문에 얼마든지 낙태가 지

연될 수 있다.

낙태 처벌 유지와 규제는 낙태를 줄이기는커녕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여성들은 안전하지 못한 불법 낙태 시술로 인해 위험에 처하고 비싼 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낙태의 위험성을 내세우며 '임신 14주 이내' 허용 방안을 옹호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임신 14주 이내" 허용방안의 근거로 임신 14주 이후 낙태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낙태가 여성에게 크게 위협해 주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낙태할 때이다. 낙태를 규제하고 처벌하면 오히려 음성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낙태가 늘어나 여성들을 위험으로 내몬다.

위험한 낙태가 우려된다면, 여성이 되도록 빨리 낙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낙태 처벌을 유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낙태가 위험해서 금지한다면, '모성 사망' 주요 요인인 출산도 금지해야 하는가?

사회·경제적 사유 기준도 모호하고 자의적이다. 국가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낙태 규제를 강화하면 사회·경제적 사유 범위가 더 좁아질 수도 있다.

상담·숙려기간 의무화도 불필요하다. 독일에서는 상담할 때 '태아가 생명에 대한 독자적 권리를 가진다'며 출산을 권유한다. 상담·숙려기간 의무제도는 이미 낙태를 결심한 여성에게 죄책감만 심어 주고 낙태를 지연시킬 뿐이다.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 여성의 삶을 옥죄는 낙태죄를 당장 폐지하고, 여성이 원하면 낙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조화?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를 존치하는 형법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낙태죄 유지에 대한 어쭙잖은 정당화다. 태아의 생명권 논리는 낙태 금지



“도로 낙태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2018년 7월 낙태죄 폐지 집회

론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터무니없게도 정부안이 “낙태 전면 합법화 방안”이라고 반발하며 '태아 생명권'이라는 궤변을 내세우며 정부안조차 더 후퇴시키려고 압박하고 있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헌재 결정에도 “태아는 모체와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라며 태아 생명권 논리를 지지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태아는 모체에서 독립한 인격체가 결코 아니다. 태아는 모체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모체에 완전히 종속돼 있는 태아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다.

태아 '독자 생존'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 현재는 태아 '독자 생존' 기간을 “임신 22주 이후”,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 이후”로 삼고 있다.

임신 후기로 갈수록 태아가 인간의 모습과 유사해지지만, '독자 생존'이 가능한 '인격체'는 아니다. 그때조차

특별한 의료 지원이 없으면 태아의 생존이 불가능하다. 임신 34주 이내 태아는 자가호흡도 불가능하다.

'태아 생명권' 논리는 낙태 금지와 규

제를 합리화하고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태아 생명권 논리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

낙태 처벌과 규제는 노동계급과 서민층 여성, 청소년에게 특히 해악적이다. 낙태 규제는 계급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부유층 여성들은 낙태 규제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어렵지 않게 낙태를 선택할 수 있지만, 노동계급과 서민층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는 물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합법화가 필요하다. 기간과 사유 제한 폐지와 더불어, 평범한 여성들이 쉽고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합법화 조치가 중요하다. 여성이 원하면 언제든지 국가가 낙태약(미프진)과 낙태 시술을 무상으

로 제공해야 한다. 낙태 유급 휴가도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낙태죄 관련 법률 개정안을 40일 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낙태 관련 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이다. 낙태 반대 진영은 낙태 허용 범위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 감정적 선동과 거짓 주장을 뒤섞으며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여성의 평등과 해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낱알이 반박하고, 낙태 처벌과 규제를 유지하려는 문재인 정부에도 맞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일관되게 옹호하며 싸워야 한다.

OECD 평균보다 2배 높은 대학 교육비

정부 재정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하라

박혜신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교육부가 'OECD 교육 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한국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은 정말이지 형편없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 비율은 GDP 대비 3.6퍼센트로 OECD 평균(4.1퍼센트)보다 낮다. 반면, 민간 부담 비율은 1.4퍼센트로 OECD 평균(0.8퍼센트)

보다 높다.

특히 고등교육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은 0.6퍼센트로, OECD 평균인 1퍼센트의 절반 수준이고, 민간 부담률(1퍼센트)은 OECD 평균(0.4퍼센트)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배자들은 한국이 '교육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정부의 지원은 보잘 것없다.

사실 한국이 OECD 교육 지표에서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한 것이 하루이틀 일은 아니다.

한국 교육 특성 탓?

역대 정부는 교육 재정에 턱없이 적은 돈만 지원해 왔다. 게다가 해마다 교육 재정의 비중은 줄어들었는데 문재인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GDP 대비 민간 부담률이 더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OECD 평가 지표의 변화로

몇 가지 항목이 제외돼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한국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는 게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교육부는 이것이 '사립대 비중이 높고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특성' 탓이라고 말한다. 군색한 변명이다.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사립대학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그럴 권한이 있는데도 현실 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정부 재정 지원이 부족하니 등록금을 올리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협박한다. 지난해 연말에도 사립대총장협의회는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황폐화되고, 교육환경이 열악해졌다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더니, 결국 “국가 경쟁력”이 훼손됐다면서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 대학 등록금은

▶ 3면으로 이어짐

재정준칙 발표

긴축재정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정선영

10월 5일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퍼센트, 통합재정수지1 적자는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포함시켜 2025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은 정부의 재정준칙이 “땡탕”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GDP 대비 40퍼센트대인 국가채무 비율을 2025년부터 60퍼센트로 제한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자신은 돈을 펑펑 쓰겠다는 것이라며 말이다. 더욱 강력한 긴축 정책을 쓰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사정은 판판이다.

9월 초 기획재정부는 저성장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국가채무가 2024년에 GDP 대비 58.6퍼센트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43~2045년에는 84~99퍼센트로 늘 것이라는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며 2030년에 75.5퍼센트에 이어 2040년에는 103.9퍼센트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60퍼센트로 한정하겠다는 것은 재정적자를 상당히 줄이는 긴축 정책을 쓰겠다는 것이다. 위기 상황 때 재정 정책을 쓸 여지를 열어 뒀다 할지라도 말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을 발표하면서 2025년 이후 국가채무 비율 60퍼센트를 지키려면 지금부터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도 재정준칙은 복지 삭감을 위한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이 거세게 추진되던 1990년대 초에 미국, 유럽 등에서 강도 높은 재정준칙을 시행했



세계 지원은 생색만 내고 긴축을 예고하다 10월 5일 재정준칙 발표 브리핑

다.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퍼센트, 재정적자를 3퍼센트로 제한한 약명 늪은 유럽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대표 사례이다.

또 미국, 유럽 등의 지배자들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때 기업과 부자들에게 막대한 재정을 지원했지만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세수가 줄어 재정적자 문제가 커지자, 2010년경부터 긴축 정책을 본격화했다. 복지와 임금이 삭감됐다. 그리스 노동계급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와 함께 세계적 불황이 심화하자 각국 정부는 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2008년 위기 때 이상으로 돈을 쏟아부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노동자들에게 그 고통을 떠넘기는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건강보험료를 인상했을 뿐 아니라 교육 예산을 삭감했고,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0.9퍼센트로 결정(실질임금 삭감)하는 등 지출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다.

재정준칙 제정은 이처럼 노동자·서민에게 재정적자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신호로 봐야 한다.

공격 강화 신호

정부와 우파는 모두 재정적자를 걱정한다면서도 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이나 군비 증가 등은 문제삼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올해 9월 초까지 기업 지원에 쓴 돈은 49조 7400억 원에 이른다. 고용유지에 쓰인 돈은 1조 3900억 원, 실업대책에 쓰인 돈은 2조 1700억 원에 불과했는데 말이다. 기업 지원 액수가 고용 유지 대책의 35배, 실업대책의 22배나 되는 것이다.(이창근, ‘코로나19 대응 실적을 통해 본 문재인 정부 위기 대응 성격’, 민주노동연구원)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 이윤을 위해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고, 김종인 등 우파들은 노동유연성을 더 강화해

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또 기업과 우파들은 법인세 인하도 요구하고 있다. 기업에게 쓰는 돈은 투자이고, 노동자·서민을 위한 돈은 낭비라는 식이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정의당·진보당 등 개혁주의 진영은 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긴축론자들에 맞서 복지를 늘리자는 의도에서 제기하는 것으로 긴축론자들보다 백배는 더 나은 입장이다.

그런데 이들은 자본주의와 조화를 이루고 사회의 주류를 설득하려고 이런 주장을 덧붙인다. 지금과 같은 위기 시기에는 재정 지출을 늘려서 소비를 부양해야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확장 재정이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케인스주의적 주장에는 허점이 많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일부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이윤율을 근본에서

회복시켜 주지는 못한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이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 회복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에는 긴축론에 맞서 국가채무 증가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채무 증가가 체제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국가채무 증가는 심각한 재정위기와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한계를 보여 준다. 재정 지원을 늘려 경제 회복을 이루자는 사람들의 주장에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그런 의도가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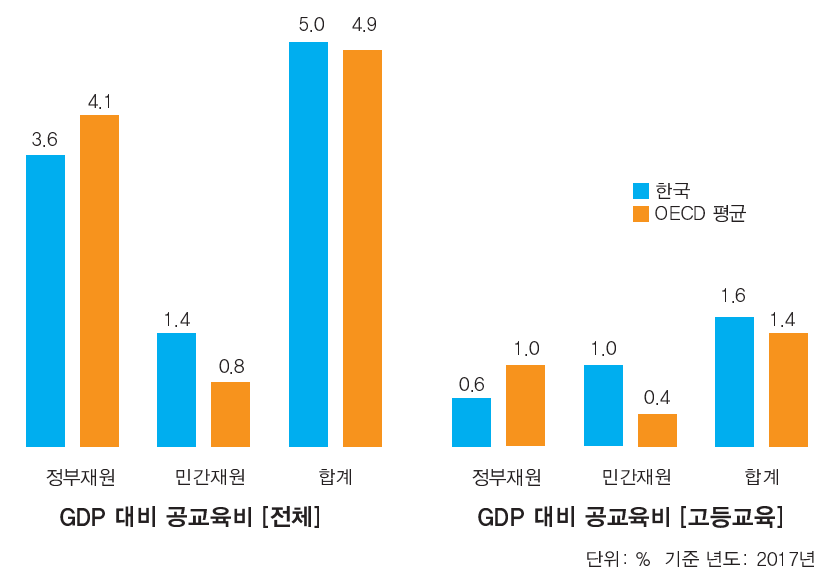
따라서 주류의 긴축론에 제대로 맞서려면 케인스가 아니라 마르크스의 논리가 필요하다. 경제 성장이나 이윤보다 노동계급의 삶을 우선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요구와 투쟁을 확대하면서 그 힘을 이용해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뒤집기 위한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심각한 위기 시기에서는 그런 혁명적 정치를 추구할 때 작은 투쟁도 더 효과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다.

용어설명

통합재정수지

일반 세출입에 국민연금, 사회기금 등 사회보장 기금까지 포함한 재정수지. 최근까지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려고 일반 세출입 부문을 관리재정수지로 떼어내 사용해 왔다. 한국은 국민연금 지급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사회보장 부문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 2면에서 이어짐



등결돼 왔다. 살인적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운동이 커지는 등 대중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한국의 등록금은 높을 대로 높아져 있어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약 1058만 원으로 OECD 국

가들 중 4번째로 높다(국공립대는 약 590만 원으로 8위). 대학 당국들은 10년 전까지 물가 상승률의 몇 곱절씩 등록금을 인상한 바 있다.

게다가 사립대들은 돈이 많다. 2018년 기준 사립대들이 쌓아놓은 적립금은 모두 7조 8260억 원이나 된다. 설령 대학의 재정난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학생·학부모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교육재정 대폭 확대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불평등 해소”, “등록금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알맹이 없이 생색내기엔 바쁘다.

올해 초 교육부는 고등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했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이번 OECD 지표 발표 뒤엔 ‘그래도 이전보다 교육 예산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3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정부 예산 전체에서 고등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1.4퍼센트)은 그대로였다. 정부 예산이 2013년 303조 8500억 원에서 2018년 368조 6500억 원으로 늘어나 고등교육 예산도 늘어났을 뿐이다(서영인 외, <교육재정 대책 및 종합 진단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민간 부담은 여전히 OECD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심화로 노동계급의 고통이 가중된 것을 생각하면 정부의 생색내기는 염치없는 일이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국가 장학금 재정도 줄었다.(학령인구가 감소해 대학생 수가 1.8퍼센트 줄어 수치상 개선이 있어 보일 뿐이다.)

평범한 가정의 대학생과 청년들은 졸업 후 취직해도 빚더미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 2015~2019년 학자금 대출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가 4만 6195명이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 비율을 OECD 평균인 GDP의 1.4퍼센트(약 25조 원가량)로 높이면 무상 등록금이 가능하다.

전 세계 지배자들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계급의 삶보단 이윤을 우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기업주 지원과 군비는 계속 늘리면서 교육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하다. 교육에서도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우선하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재정 부족이 아니라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다.

문재인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확대해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 등록금 인화와 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연평도 피격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한반도 불안정과 문재인 정부 3년 반 돌아보기

김영익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총에 맞아 피살됐다. 어떤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나,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붙잡은 채 NLL 이북 해역으로 흘러갔다가 변을 당했다. 안타까운 비극이다.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위기 의식이 이번 사태의 한 배경이 된 듯하다.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 내내 국경을 봉쇄해 왔다. 게다가 지난 7월 한 탈북민이 해엄쳐서 개성으로 월북했다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북한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다. 이때 북한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개성시 전역을 봉쇄했다. 월북을 막지 못한 일선 부대들에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그 후 개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피격 사건이 일어났다. 7월 이후 북한군이 서남 해안 월경 문제에 매우 예민해진 것이다.

사건 직후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했지만, 북한군이 민간인을 바다 위에서 사살한 일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저항할 의사가 없는 비무장 개인을 군대가 공격한 것은 누가 봐도 잔혹하고, 불필요한 과잉 대처였다.

NLL

피격 사건에 관한 남북 당국의 발표에 차이가 있고, 사건의 세부 내용을 놓고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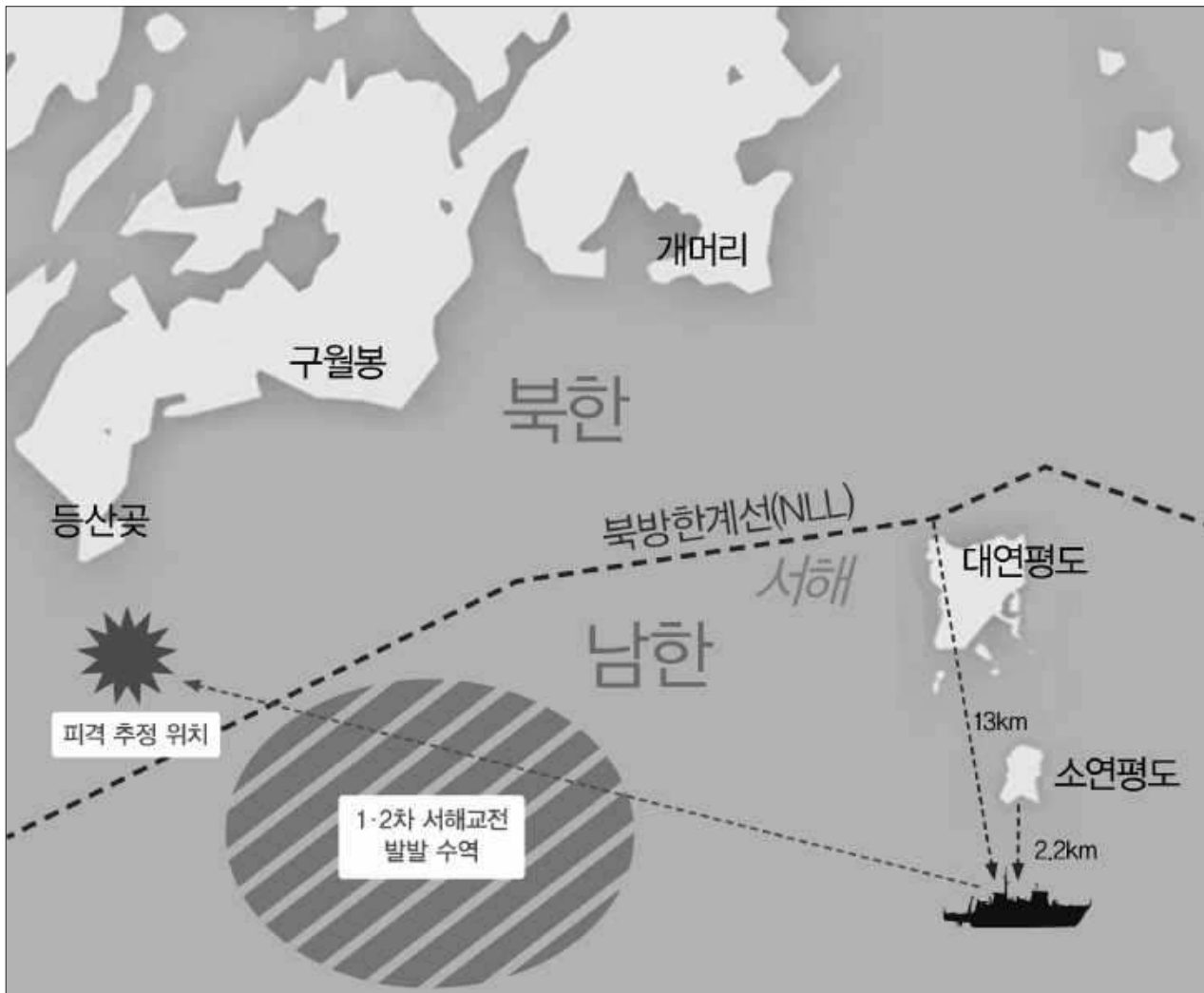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피격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전체적인 배경, 즉 구조적 원인을 주목해야 한다.

피격 사건이 일어난 곳은 NLL 인근 수역이었다. 이곳은 남북 간에 매우 민감한 바다다. 서해에는 남북 쌍방이 합의한 분계선이 없다. 그래서 NLL에서는 여러 차례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번 사고가 벌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역은 바로 1·2차 서해교전지 일어난 곳과 지척이다. NLL 문제로 군인들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이리저리한 사건·사고에 휘말려 희생될 위험이 상존하는 곳인 것이다.

서해에서 군사 충돌과 불필요한 희생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고, 이런 우려가 2018년에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에 반영돼 있다.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이 평화수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 보장 조항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이 합의는 별무소용이었다. 2018년에 복구된 남북 통신망들도 최근 남북관계 악화로 단절돼 정작 이럴 때는 쓸모가 없었다.

따라서 연평도 민간인 피격 사건에는 최근 남북관계 악화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더 큰 맥락에서는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의 불안정 문제가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 많은 사람들이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이 완화되고 한반도 평화가 진전되기를 희



이번 연평도 피격 사건(위)과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아래)는 2018년 정상회담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불안정이 여전한함을 보여 준다

망했다. 대통령 문재인 자신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9월 연평도 피격 사건 등은 이런 약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제국주의와 한반도

세계 제국주의 체제의 상황은 항상 한반도의 중장기적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오늘날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이 점증하는 상황은 한반도를 근본에서 불안정하게 만들어 왔다.

미국은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패권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미국의 지정학 전문가들은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을 우려해 왔다.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다른 강대국들이 미국과의 격차를 점차 좁혀 왔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지배자들이 중국을 미국 패권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경제가 세계시장과의 연계 강화 속에서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중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미국 지배자들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미국 패권을 갇아먹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본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시간이 갈수록 강경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정부 문서에 중국 등을 공공연히 적으로 규정해 왔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 왔다.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 때문에 아시아에서 불안정이 증대했다. 특히,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지에서 긴장이 점증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않아 이런 지역 중 어느 한 곳에서 제한전 같은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다.

한반도는 이런 상황과 긴밀히 연동돼 있다. 미국이 한국을 대중국 포위전략의 하위 파트너로 삼고자 하는 데다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대응의 명분으로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며 북한을 압박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특정한 상황과 맞물려 한반도의 긴장을 증폭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한반도는 불안정의 최전선이 될 수도 있다.

2017년은 한반도의 긴장이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 해였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오랜 압박에 시달려 온 북한이 마침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트럼프 정부가 “화염과 분노” 위협을 가하면서 긴장이 높아졌다.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쓴 《격노》를 보면 이때 미국 국방장관 매티스가 북한의 한 항구를 경고 차원에서 폭격하는 계획까지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한다. 비록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2017년에 집권한 대통령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하고 “동북아 평화 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7월에는 나름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자 대화 제안인 ‘베를린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실제 행보는 이런 약속들과는 동떨어질 때가 많았다. 특히, 대북 정책에서 트럼프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대북 압박에 동참했다. 심지어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집권한 후 바로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다. 참수작전 같은 전임 우파 정부의 대북 선제 타격 계획들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한 군사력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고 봤다. 여기서 모순과 한계가 발생했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대북 압박에 보조를 맞추면서, “[북한이] 핵 없이도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약속은 공허하게 들렸다.

싱가포르와 하노이

그러다가 2018년 초 한반도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화염과 분노” 정국이 끝나고 긴장이 완화됐다.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런 전환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북·미 간 중재와 개입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좌파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상황을 주도해 국면이 바뀌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견줘 남한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문제에서 주된 플레이어라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이때 트럼프 정부가 태도를 바뀌 북한에 접근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트럼프가 내민 손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자본주의 국제 질서 안에 안착해 자국의 주권을 온전히 유지할 공간을 확보하기를 열망했다. 그러려면 미국과의 협상과 타협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의 이런 전략은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대화 국면이 시작됐다고 해서,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의미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제국주의 간 경쟁은 계속 점증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이른바 “국제사회”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바로 이 국제사회의 중심인 주변 강대국들의 관계가 날로 험악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남·북·미 대화 테이블 바깥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의 파고가 언제든 대화 테이블을 덮칠 수 있었다.

물론 미국 트럼프 정부로서도 북한과 당장 전면전을 각오할 게 아니라면 통제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게 한반도 정세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것보다 국내 정치적 이해득실 여부에 관심이 더 컸던 듯하다. 이 점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시사저널, 2020)에서도 확인된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는 이 정상회담을 “그저 언론의 주목을 끌기 위한 행사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알맹이가 없는 공식 성명에 서명하고, 승리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싱가포르]를 뚫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볼턴은 썼다.

북·미 양국 정상이 만나는 “판타지” 같은 상황이 연출됐음에도, 싱가포르 북미 회담으로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는 사실이 아니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군다나 싱가포르 합의 직후부터 비핵화 정의와 합의 이행의 순서 등을 놓고 북·미 양측 사이에 견해차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등을 폐쇄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의 말마따나 북한에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물론 트럼프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명시적으로 대규모 연합훈련은 자제됐으나, 이는 북한의 요구보다는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트럼프의 평소 소신과 관련 있는 결정이었다. 오히려 《격노》에 나온 대로 미군은 연합훈련을 작은 규모로 쪼개서 진행했다. 대

북제재의 경우, 일부라도 풀어주는 건 커녕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오히려 더 추가되고 강화됐다. 즉, 정상회담을 했어도 미국은 대북 압박의 고삐를 전혀 늦추지 않았던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그리고 6월 판문점에서 트럼프는 다시 김정은을 만났다. 그러나 2월 하노이 회담은 합의 없이 결렬됐다. 트럼프 정부가 이른바 ‘빅딜 문서’, 즉 북한에 핵무기와 관련 시설, 생화학 무기 등 일체를 무조건 포기하라는 문서를 북한에 들이밀었다. 비핵화 문제 등에서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반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 민생과 관련한 제재 일부를 풀어 달라는 북한의 요구는 거절했다. 6월 판문점 회동도 별 합의 없이 끝났다.

북·미 정상회담이 안고 있는 한계와 제약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8년 4월 판문점과 9월 평양에서 김정은과 문재인은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군사합의를 비롯해 남북관계에 관한 몇 가지 합의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와 친정부 언론들은 이 합의들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에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매우 위선적이었다.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고 ‘한반도 평화 경제’를 강조해 놓고는, 미국과 함께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했다. 지난해 8월 한미연합훈련에는 ‘수복지역에 대한 치안·질서 유지’와 ‘안정화 작전’ 훈련이 포함됐다. 이는 북한 점령 훈련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약속한 “단계적 군축”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군축은커녕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를 능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F-35, 글로벌 호크 등은 모두 북한을 자극하는 전략 무기이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301조 원을 국방예산에 쏟아붓는 국방중기계획을 내놴다.

그래 놓고 문재인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남북한이 평화경제로 일 본을 뛰어넘자’고 했다. 그 직후 북한 당국이 문재인을 가리켜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우겨도 세계 웃기는 사람”이라고 맹비난한 까닭이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이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었다.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국제 대북 제재에 협력해야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한·미 간 채널을 설치해 대북 정책을 조율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교류·협력 문제는 워킹그룹의 관여를 피할 수 없었다. 심지어 타미플루 같은 독감 치료제 지원도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는 워킹그룹의 관여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목록(2018년)

날짜	집행 기구	제재 이유	제재 내용
7.23	재무부 해외 자산 관리국, 국토안보부의 관세국경보호청 및 이민세관집행국, 국무부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 대처법	사업체 공급망에 북한 국적 또는 시민권 노동자 사용 금지
8.3*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	금융 활동	러시아 은행, 단통중성무역, 조선은금회사, 리종원
8.15*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	대북 운송	러시아 기업3, 개인1
8.21*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	선박 환적	러시아 기업2, 선박6
9.6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	소니픽처스 해킹, 워나크라이 랜섬웨어	박진혁,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자산 동결
9.13*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	외화 수익 창출	중국 기업 1, 러시아 기업 1, 정성화
10.4*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	무기와 사치품 거래	터키 국적자, 터키 회사, 리성은(몽골 주재 참사)
10.25*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	북과 상품 계약, 돈세탁	싱가포르 국적자 1명, 회사 2, 선박 2척 제재 대상 지정
11.19*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	제재 기업에 연관, 제재 회피 조언	남아공 국적자 특별지정제재대상 지정
11.26*	법무부	돈 세탁	싱가포르 기업1, 중국기업 2 자산 몰수
11.29	대통령, 국무장관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비인도적 지원, 교육 및 문화교류 지원금, 세계은행 및 IMF의 대출 금지
12.10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	인권 침해	최룡해, 정경택, 박광호 제재

출처: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대북제재에 대한 오해, 서재정, <오마이뉴스>(2019년 4월 23일)

*는 북한 이외의 제3국 제재

로 좌절됐다.

많은 진보·좌파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를 걸 만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남·북/북·미 정상회담들로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보며 이 회담들을 지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국 지배계급의 정치 세력이다. 민주당은 이미 세 번이나 집권했고, 그 과정에서 지배계급의 제1 선호 정당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지배계급의 유기적 일부로 자리매김해 있다.

한국 지배계급은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일원이고, 현존 제국주의 체제 안에서 나름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들은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한미동맹을 통해 유형·무형의 이익을 얻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친제국주의·군국주의를 지향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봐야,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협력 같은 포퓰리즘적 태도를 보이는 한편으로 국제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협력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올해의 한반도 긴장

북·미 대화의 교착, 계속되는 대북 압박은 북한 당국을 더 초조하게 만들었던 듯하다. 지난해 11월 22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최선희는 미국에게 받은 것은 “배신감뿐이다” 하고 말했다. 물론 북한 당국은 이런 얘기 끝에 트럼프 개인에 대한 기대는 접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남북 간에도 긴장이 높아졌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단거리 발사체들을 잇달아 발사한 배경이다.

긴장 고조는 올 6월 남북관계 위기로 표출됐다.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는 사실상 대적 관계라고 했다. 남북 간 통신선이 모두 차단됐고 마침내 북한 당국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2018년 남북 군사합의는 이때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 논의의 시작인 서해의 긴장에도 영향을 줬다.

이미 서해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현장이다. 예컨대 지난 8월 서해상에서 벌인 중국군의 훈련을 감시하려고 미군 정찰기 U-2기가 오산공군기지에서 발진해 중국군 훈련 상공에 접근했고, 중국 정부가 이에 강력 항의하며 예민하게 나왔다. 이런 사례는 서해가 미·중 경쟁의 한 무대임을, 이런 경쟁이 그 지역을 불안케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김정은이 직접 NLL 인근 창린도에 나타나 일선 방어 부대에 사격 훈련을 지시했다. 군사합의 위반이었지만,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불만과 압박이 반영된 행동이었다. 6월에 한창 위기가 벌어질 때 북한이 언급한 추가 대적 군사행동에 ‘서남해안 등 접경지 포병부대 증강 및 훈련 재개’가 포함돼 있었다. 비록 김정은이 이 행동 계획을 ‘보류’했지만 말이다. 즉, 연평도 피격 사건에 앞서 이미 서해 바다에 긴장이 쌓여 있던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한 말을 다시 강조하자면, 연평도 피격 사건 같은 작은 비극도 큰 틀에서 제국주의 간 경쟁의 영향을 받는 한반도의 불안정 문제와 연동돼 있다.

결론

오늘날 한반도 상황을 피상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느닷없는 ‘도발’ 때문

에 우리가 사는 한반도가 계속 불안하고 평화가 요원해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세계적 차원의 제국주의 경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보면 그림은 사뭇 달라진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 중심으로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이 점증하면서 생긴 불안정이 핵심이다.

지난 3년 반을 돌아보건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대중의 기대를 배신했다. 이는 제국주의 세계 체제 안에서 한국 지배계급이 갖고 있는 나름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는 독립적인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 지배계급의 친제국주의·군사주의에 맞선 반제국주의적 대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제국주의 문제를 회피하는 정의당 같은 주류 개혁주의는 오늘날 한반도 불안정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정의당은 안보 문제에서 남한 국가를 방어하다 보니, 이번 피격 사건처럼 남북 긴장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제국주의 문제와 이로 인한 한반도의 구조적 불안정성 문제를 간과한 채 북한의 ‘도발’을 주로 규탄한다.

그리고 반제국주의적 대안은 자본주의 반대와 분리될 수 없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는 경쟁적 축적이라는 자본주의의 경쟁 논리에서 비롯된 체제다.

대립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중에 어느 한 편도 지지하지 않으면서, 오늘 날처럼 경제 침체가 심각한 시기에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해 싸워야만 우리는 항구적 평화를 향해 조금이라도 전진하고 연평도 민간인 피격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

태국 사회주의자가 전하는

태국 반독재 투쟁의 배경과 전망

이 글은 태국 사회주의 단체 소속 활동가 **팻차니 쿨락이** 9월 30일에 발표한 글을 편집한 것이다.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세 손가락 경례는 오늘날 태국의 저항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항의 상징이다. 이 경례는 영화 《형거 계입》에서 모방한 것으로 세 가지 원칙,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한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군사 독재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2014년부터는 그해에 일어난 쿠데타에 반대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고등학생 등 많은 이들이 시위에 새롭게 참여해 전국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일어선고 있다.

2020년 9월 19일 ‘탐마삿 · 시위대 공동전선(UFTD)이 탐마삿대학교와

방콕 근처 공원에서 조직한 시위에는 수년 이래 최대 규모인 10만 명가량이 참가했다. 그 소식이 언론 헤드라인을 도배했다. 이날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타이락타이당 소속의 총리 탁신 친나왓을 몰아낸 지 14년이 되는 날이었다.

학생 활동가들이 이끈 이 반정부 시위는 3가지 정치적 요구(의회 해산, 새 헌법 작성 등)와 10가지 왕정 개혁 요구에 한층 힘을 실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위는 모두가 법적 평등을 누리는 현대적 태국 사회로 이행하는 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위였지만, 아직도 정부와 기득권층은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UFTD는 10월 14일에 시위를 더 키울 계획이다.

9월 24일 ‘자유 민중’이 이끄는 의

회 앞 시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군부가 만든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였다. 2017년에 제정된 현 헌법은 2014년 쿠데타를 주도한 현 총리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2019년 선거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결국 의회는 개헌 결정을 미루기로 표결했다. 많은 하원 의원들과 임명된[선출되지 않은] 상원 의원들은 정부를 편들고 자기 권력을 지키고 싶어 한다.

시위대는 대단히 분노했다. ‘자유 민중’ 지도자들은 이날 이후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고 10월에 더 많은 사람들과 야당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계속 묵묵부답이면 거대한 시위가 열리는 10월은 결전의 나날이 될지도 모른다.

학생 시위의 시작과 부상

최초의 주요 정치 시위는 올해 7월 18일 방콕의 민주기념탑 앞에서 ‘자유 청년’의 청년 활동가들이 주도한 시위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제한은 풀렸지만 비상사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들은 의회 해산과 새로운 헌법을 요구했다. SNS에는 ‘이제는 참지 않는다’, ‘이제는 못 참겠다’, ‘자유 청년’, ‘우리 세대에서 끝내자’, ‘싸우지 않으면 계속 노예로 살리’, ‘믿음은 깨졌다’, ‘정치가 좋은 것일 수 있다면’(정치가 군부 개입과 부패로 얼룩지지 않은 나라를 상상해 보라는 뜻) 등의 해시 태그가 대유행했다. 이날 시위 이후 전국에서 학생 시위가 폭발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도 2월에 법원이 ‘미래전진당’(FFP)을 해산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의 첫 물결이 있었다. 미래전진당은 대체로 청년들이 지지하는 진보 정당이었다. 해산 결정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그러나 많은 대학에서 일었던 시위들은 코로나19 탓에 잦아들었다가 7월에 다시 분출했다.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대중은 벌써 6년째 군사 독재 치하에 있다. 2014년에 군부는 선출된 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았고 쿠데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정치적 갈등을 억제했다. 더욱이 태국 정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엘리트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 정부, 보수 세력, 대기업들의 지배하에서 이런 비민주성은 무수한 문제를 낳았다.

엘리트들의 정치는 자기 계급의 부를 지속시켜 줄 정치 구조를 만들었다. 그들이 구축한 체제는 훨씬 더 불

평등한 구조로서,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국가 예산을 사치스러운 생활에 전용하며, 무기를 구입해서 민중을 위협하고, 특권을 재생산해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찾는 와중에도 부자의 자녀들이 부자로 태어나고 정치 · 경제 권력을 물려받게 한다. 지금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이런 특권 체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외출제한령 이후의 여러 당면 쟁점들도 두 번째 학생 시위 물결을 촉발한 한 요인이다. 캄보디아로 망명한 태국 정치 활동가의 실종,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긴급조치 연장, 억압적인 교육 제도, VIP 외국인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사법 체계의 이중 잣대,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공안 당국, 태국 군대의 무기 쇼핑, 돈을 흥청망청 써대는 왕정, 대규모 해고와 빈곤이 그런 쟁점이었다.

운동의 현재 요구들

앞서말한 3+10 요구들은 다음과 같다.

1. 의회를 해산하라. 선거를 새로 실시해서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총리 뿌라웃 쩌오차를 해임하라. 우리는 더는 쿠데타도, 선출되지 않은 과도 정부도 원치 않는다.
2. 헌법을 새로 써라. 대중이 그 과정에 참여해야만 엘리트 계급 정권을 저지하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복지를 제공하는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3. 공안 당국은 더는 대중을 괴롭히지 마라. 인권을 존중하라.
- 10가지 왕실 개혁 요구는 8월 UFTD가 제안한 것들이다. 왕을 기소하지 못하게 한 2017년 헌법 6조 폐지, 의회가 왕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추가, 국왕 비판을 처벌하는 형법 112조 폐지, 2018년 왕실재산법을 폐지해 재무부가 관장하는 왕실 자산과 왕의 개인적 자산을 엄격히 구별할 것, 왕이 더는 쿠데타를

승인할 수 없도록 할 것 등이 그 요구에 포함돼 있다.

이런 요구들을 쟁취하고자 민주주의 운동은 성장하고 있고 시위는 더 커지고 있다. 군사 독재를 물리칠 새로운 전략으로 총파업이 고려되고 있다. 9월 19일 대규모 시위에서 한 학생 지도자는 10월 14일 일터와 학교에서 ‘총파업’을 벌이자고 선포했다. 그것이 성사될지, 아니면 산업 투쟁에는 못 미치는 개별 행동에 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운동의 성장 요소들

현재 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주로 ‘자유 청년’, ‘태국 학생 연합’ 등 대학생과 청년들이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교내의 권위주의에 반대해 떨어져 어나고 있다. 그들은 ‘자유 민중’, ‘탐마삿 · 시위대 공동전선’ 등으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성장하는 네트워크에는 성소수자, 노동, 환경, 지역 운동, 사회 권리, 농촌, 여성

등 다양한 부문의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성장하는 운동 속에서 다양한 진보적 아이디어가 개진되고 있고 활동가들이 더 급진적이다. 이 네트워크들은 여러 곳에서 일상적으로 작은 집회들을 조직하고 있다. 방콕 외에도 북부의 치앙마이나 북동부의 콘겐 같은 대도시에서는 3+10 요구를 내건 더 큰 집회가 매일 열린다.

지배자들의 대응

국왕 마하 와치랄롱꼰은 시위대의 왕권 축소 요구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총리 뿌라웃은 개헌 과정에 인내심을 가지리면서 평화롭게 질서를 유지해야 정부가 나랏일, 특히 경제를 돌볼 수 있다고 말한다.

총리 뿌라웃은 대중을 종종 우습게 여긴다. 군부는 극우의 방식으로 프로파간다, 가짜 뉴스, 혐오 연설로 대중을 분열시키려 한다. 최근에는 청년 운동을 비애국적이라고 공격했다. 내각

과 상원의원, 군부 · 보수 세력 지지자들은 왕을 괴롭히는 철부지들이라고 청년들을 비난한다.

한편, 공안 당국은 친민주파 학생 활동가들과 전투적 노조 활동가들을 공세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경찰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활동가 10여 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위신을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이용해 운동을 최대한 억제하려 할 수 있다.

운동의 승리를 위해

청년 세대는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서 중요한 집단이다. 이 청년들이 노동자 조직과 노동자 권리에 대해 배운다면 불안정 고용과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태국의 미래가 이 민주주의 운동에 달려 있다. 이 운동은 [극심한 불평등과 경제적 고통을 해결할] 보편적 복지 요구를 통한 평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 NGO, 농민, 노동자 단체들이 청년들의 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중 운동의 정치는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운동이 더 크게 단결하고 더 전투적이길 진심으로 바란

다. 그러나 투쟁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개헌 절차에서 책략을 쓰고 있고, 이 절차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운동이 보잘것없는 개혁에 매달리게 될 위험이 있다.

다른 한 가지 난점은 더 전투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할 총파업이나 산업 투쟁이 벌어진 적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투쟁은 단기간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독재의 영향력은 단지 통치자들만이 아니라 태국 사회 전반에 그물망처럼 뻗어 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작은 단위에서까지 자유, 평등, 참여의 가치와 문화를 배양할 운동을 건설해서 이 세대에서 독재를 극복해야 한다.

번역 김종환

미국 포틀랜드 현지 소식

단결과 조직화로 극우 ‘프라우드 보이스’ 물리치다

5월 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분출한 이래, 오리건주(州) 포틀랜드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시위가 벌어졌고, 미국에서 손꼽히게 치열한 투쟁의 현장이 됐다. 경찰의 거듭되는 폭력 진압에도 시위는 계속됐고, 7월에는 트럼프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을 꺾으려 포틀랜드를 표적 삼아 연방 병력을 투입하기도 했다. 이 때도 시위대는 불굴의 투쟁으로 트럼프의 공격을 물리쳤다. 한편, 강경 우익과 극우도 포틀랜드를 겨냥해 집중 행동을 벌여 왔다. 이에 맞서면서 포틀랜드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중요한 발전을 겪고 있다. 9월 26일 포틀랜드에서는 극우 ‘프라우드 보이스’의 집회에 맞서 그 10배가 넘는 규모의 맞불 집회가 벌어졌는데,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마르크스21’ 회원 **선 커밍**이 그 소식을 전한다.

9월 26일 오리건주(州) 포틀랜드에서 거리의 나치 폭력 조직 ‘프라우드 보이스’는 수직 열세로 굴욕을 맛봤다. 인종차별과 폭력의 난장이 될 그들의 행사는 1만여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가을비에 쫓딱 젖은 폭죽 마냥 초라하게 끝났다.

반(反)파시즘 단체들, 지역 단체들, 노동조합원들의 연합은 함께 힘을 모아 맞불 집회와 지역 행사를 열었고 2000명 넘는 포틀랜드 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했다. 반면 ‘프라우드 보이스’와 그들과 어울려 지내는 온갖 패거리들은 도시 외곽에서 연 그들의 증오 축제에 고작 200명 밖에 동원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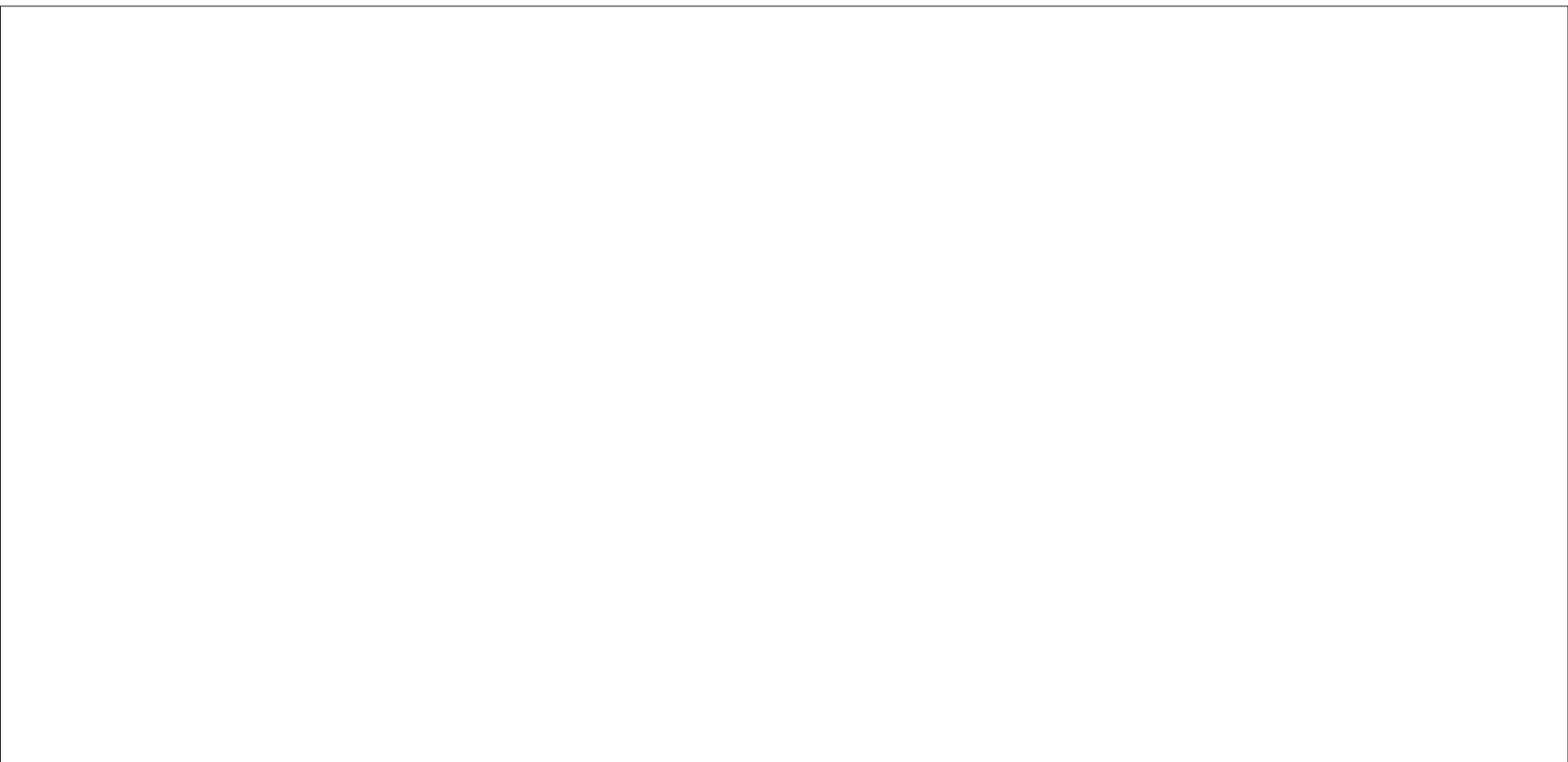
파시스트들은 오랫동안 포틀랜드를 폭력을 휘두르고 조직화하는 표적으로 삼아 왔다.

1980년대에는 나치 폭력배들이 포틀랜드 거리를 누볐다. 1988년에 이들은 에티오피아 유학생 물루게타 세라우를 살해했다. 2017년에는 제러미 크리스천이 광역경전철 안에서 리키 베스트와 탈린 남카이-메체를 살해했다. 두 사람은 크리스천이 두 소녀에게 인종차별적 욕설을 내뱉는 것을 제지하다가 살해당했다. 크리스천은 극우 폭력 조직 ‘애국기도회’ 모임의 열성 참가자이자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였다.

포틀랜드에서 100일 넘게 벌어지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는 국가뿐 아니라 극우의 반격에도 직면해 왔다. 불과 한 달 전에 파시스트 동조자로 알려진 사람들이 시위대에 파이프 폭탄을 던졌다.

이후 전개된 상황은 기이하고 섬뜩하다. 8월 29일에 ‘애국기도회’ 회원 애런 대니얼슨이 도심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과 연방 수사국(FBI)은 용의자로 지목된 반(反)파시즘 운동 지지자 마이클 레이노엘을 친구 집 앞에서 사살했다.(그전에 레이노엘은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 주장했다.) 경찰과 FBI가 그를 사살한 정황은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트럼프는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트



9월 26일 극우를 물리친 맞불 집회에 참가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

럼프는 레이노엘을 사살한 것이 “적절한 응징”이었다고 했다. 그동안 포틀랜드 시 당국, 오리건주 주지사, 포틀랜드 시장은 파시스트를 막을 조치를 일절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포틀랜드 시경은 파시스트들의 시위에 도움을 줬 왔다. [2019년에는] 포틀랜드 경찰관이 ‘애국기도회’ 지도자 조이 김슨과 우호적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영상에 찍히고, 포틀랜드 경찰과 조이 김슨이 살갑게 나눈 문자 메시지가 유출되기도 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포틀랜드의 활동가·조직자들과 지역 사회 전체가 9월 26일에 파시스트들이 포틀랜드로 대거 몰려올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집회 전에 유출된 “오리건 애국자 연합”의 온라인 채팅 내용을 보면 이들은 참가자들에게 무기·탄약 소지를 권장하고 폭력을 예고·조장했다.

이날 반(反)파시즘 집회는 포틀랜드 도심에 있는 페니술라 파크에서 열렸다. 집회에 참가한 ‘실업자평의회’ 회원 로리 가토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사건들과 카일 리튼하우스[위스콘신주(州) 케노샤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를 총격 살해한 극우 같은 자들에 대한 송배를 뉴스에서 보면서, 이런 자들이 대담해지고 있다는 걱정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도시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 주고 싶습니다. 설령 그들이 겁나더라도 우리는 집회에 나와 옳은 일을 할 것입니다.”

집회 조직에 참가한 미국 민주사회당(DSA), 지역 운동 단체 ‘팍 모브’, ‘로즈 시티 안티파(Antifa)’[로즈 시티(장미의 도시)는 포틀랜드의 별칭이다, ‘흑인 목숨을 지키고 파시즘에 맞서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 단체의 활동가들은, 강 건너 비교적 외딴 곳에 있는 델타 공원에서 ‘프라우드 보이스’와 맞붙기 보다는 노스 포틀랜드 한복판에서 맞불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덕분에 이전에 포틀랜드에서 열린 반(反)파시즘 집

회들보다 참가자가 늘었다. 언론들이 폭력 사태가 나게 생겼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도 말이다.

집회 참가자 다수는 ‘흑인 목숨을 위한 투쟁’을 반(反)파시즘 운동의 필요성과 연결지었다.

미국그리스도연합교회(UCC)의 자원자들과 함께 이날 집회에 참가한 에마는 집회에 참가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혐오 단체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단체들은 제 1의 국내 테러 위협이에요.

“‘프라우드 보이스’가 아무런 반대 없이 포틀랜드에 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포틀랜드의 멋진 점 중 하나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저희 교회가 함께 하는 신앙 공동체 소속 목사들과 랍비들은 110일이 넘는 내내 시위에 참가해 왔죠.

“극우에 맞서 포틀랜드 주민 전체가 단결하고 있음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극소수 ‘안티파’가 아니에요. 그런 왜곡이 많지만 말이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 체제가 고장났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실로 광범한 연합입니다.”

연대가 절실하다

연단에서 연사들은 인종차별에 맞서 ‘흑인 목숨을 위해 싸우려면 파시즘에 맞서야 하고, 파시즘에 맞서려면 흑인 목숨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했다.

‘엄마 장벽’ 조직자 디메트리아 헤스터는 브레오나 테일러를 위해 잠시 묵념을 호소했다. 인권 변호사이자 활동가인 후안 차베스는 “인종차별이 나치를 부채질한다”고 연설했다. 음악가이자 활동가인 마이크 크렌쇼는 포틀랜드 시 경찰을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스톰트루퍼스”에 비유하며 “우리가 그들[파시스트들 — 글쓴이]에 맞서 싸우

러 나올 때마다 경찰은 그들을 보호하려 들었다”고 지적했다.

신생 단체 ‘흑인 목숨을 지키고 파시즘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조직자 로라 와들린은 노동조합 운동에서 경찰노조를 쫓아내고 노동조합 내에서 반(反)파시즘 운동을 조직할 필요성을 이렇게 역설했다.

“노동조합은 백인 국가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노동조합은 인종·젠더·종교·국적을 초월해 계급 연대를 고무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반(反)파시즘 투쟁의 최전선에 서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지배계급에 맞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곳, 바로 작업장에서 조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집회에 여러 노동조합 현수막이 나부끼고 많은 노동조합원이 참가한 것은 이곳 포틀랜드에서 벌어지는 반(反)파시즘 투쟁의 중요한 진전이다.

북서태평양목수노조(PNCU)는 파시스트들이 오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을 가장 먼저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노조 조직자 몇몇이 연대체 ‘흑인 목숨을 위한 노동자/파시즘에 맞서는 노동자’를 결성했다. 이 중 다수는 고참 반(反)파시즘 투사였지만 이번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를 계기로 운동에 처음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다.

‘흑인 목숨을 지키고 파시즘에 맞서는 노동자들’ 활동가 제이미 패트리지는 작업장에서 노동계급 저항을 건설할 필요성에 관해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의 연사가 너무 노골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어서, 파시스트 운동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에 맞선 저항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노동조합으로 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연대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지도부가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평조합원들도 오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데에 필요한 일을 한다면, (지도부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한 발 전진

9월 29일 밤 제1차 대선 TV 토론에서 트럼프는 극우 폭력을 규탄하기를 거부했다. 오히려 트럼프는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하려는 파시스트 폭력 조직들에 지지 메시지를 보냈다. ‘프라우드 보이스’에 관해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자 트럼프는 “물려서서 대기하라”고 했다. 9월 26일에 보인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파시스트들은 트럼프의 노골적인 격려에 더한층 대답해졌다.(왼쪽 기사를 보시오.)

지금까지 포틀랜드에 파시스트가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오늘날 삼중의 위기[경제 위기, 팬데믹 위기, 생태 위기]로 소외에 찌든 사람들에게 파시즘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26일 성공적으로 열린 맞불 집회가 주는 교훈은,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모을 수 있는 단결된 행동과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파시즘뿐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 맞선 저항을 건설하는 데에서 핵심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보호를 기대하거나 법률적 해법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것은 해답이 못 된다. 외려 역효과를 낳기 십상이다. ‘흑인 목숨을 위한 투쟁’과 조직 노동계급의 힘을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해결책이다.

26일 여기 포틀랜드에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한 발 전진했다. 트럼프가 극우를 고무하는 것이 우리 운동에게 후퇴가 되도록 내버려 뒀서는 안 된다. 오늘날 반(反)파시즘 운동의 희망은 조직된 노동자들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작업장과 지역에서 반(反)파시즘 운동의 기반을 키우는 일에 착수하는 데에 있다.

출처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마르크스21’ 웹사이트 / 번역 김동욱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국으로 치닫는 유럽 경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팬데믹이 낳은 미국과 영국 정치의 난맥상(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에 이어 이제에는 도널드 트럼프까지 자신의 안이함과 무책임함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을 보면 유럽연합(EU)은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EU 정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그것의 근본적 비민주성이크게 작용한 결과다. 전임 독일 재무장관이자 긴축 정책의 설계자인 볼프강 쇼이블레가 2015년 그리스 부채 위기 당시 그 비민주성을 한마디로 잘 요약한 바 있다. “선거가 경제 정책을 바꾸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일국적 수준에서 불만이 치솟아 선거에서 극우나 급진 좌파가 성과를 내더라도, EU의 철옹성 같고 무책임한 정책 결정 과정 때문에 유럽 전반에 대한 파급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듯한 이런 정치적 외관 이면에서 유럽 경제는 허물어지고 있다.

독일의 수출 경제는 여전히 유로존 경제의 기관차 구실을 하지만 그 핵심



경기 침체의 징후인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악화시키기도 할 것이다

산업들은 세계적 기술 경쟁에 취약하다. 폭스바겐 같은 기성 자동차 회사들은 테슬라 같은 아웃사이더들이 주도하는 전기차 개발을 따라잡느라 허덕이고 있다. 유럽에는 미국, 중국 IT 대기업들과 승부를 겨룰 만한 기업도 전혀 없다.

그러나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유로존 경제는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 추세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이는 팬데믹이 촉발한 경기 불황의 충격을 보여 준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유로존

경제가 올해 7.9퍼센트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 예측했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0.3퍼센트로 8월의 -0.2퍼센트보다 더 내려갔다. 디플레이션은 2010년대 유로존 위기 당시 긴축 정책의 타깃이었던 빛이 많은 회원국들에서 가장 심각하다(그리스 -2.3퍼센트, 아일랜드 -1.1퍼센트, 이탈리아 -0.9퍼센트, 스페인 -0.6퍼센트).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에 큰 어려

움을 안겨 준다. 유럽중앙은행은 물가 인상을 2퍼센트 밑으로, 아니 2퍼센트 가까이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 오래다. “유럽중앙은행은 물가 조절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전 국제통화기금(IMF) 유럽 담당 부국장 아쇼카 모디의 말이다.

물가 하락은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좋은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신자유주의가 1970년대 인플레이션과 대규모 실업의 결합에 대한 대응으로 부상한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물가 하락으로 부채를 갚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

1930년대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이른바 “부채-디플레이션 대공황론”을 개발했다. 그는 높은 수준의 부채가 경제 위기의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경제 주체들이 부채를 줄이려고 소비를 줄이고 일부는 파산한다. 그로 인해 물가가 내려가고 이는 다시 부채의 가치를 키운다. 그러면서 파산이 늘고 생산량이 줄어 더한층 물가를 끌어내리고 부채 가치를 키우는 경기 하강의 악순환이 나타난다.

피셔는 이렇게 말했다. “아직 갚지 못한 달러 하나하나가 갈수록 더 큰 달러가 되며, 처음의 과다 부채가 충분히 크면 부채의 청산(파산)은 그것이 초래한 가격 하락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 경우 청산은 더 많은 청산을 초래하게 된다.

“부채를 청산해서 부채인 달러가 줄

어더라도 그 속도는 각 부채 달러의 가치가 커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부채를 줄이려는 각자의 노력이 부채를 키우게 된다. 부풀어 오르는 달러 부채로 이뤄지는 청산이 마구잡이로 쇄도한 결과다.”

통찰력 있는 우익 경제학자인 엠브로즈 에반스-프리처드는 영국 보수 일간지 <텔레그래프>에서 EU가 이런 식의 부채-디플레이션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한다. OECD가 내다본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그리스에서 229퍼센트, 이탈리아 192퍼센트, 포르투갈 158퍼센트, 프랑스 152퍼센트, 스페인에서 150퍼센트가 된다.

유럽중앙은행과 다른 중앙은행들은 팬데믹에 대응해 경제에 통화량을 값싸게 주입하는 정책을 더 확대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지금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하도록 내버려 두자고 한다. 하지만 값싼 신용은 수익을 못 내는 수많은 “좀비 기업”들을 연명시키고 있으며, 경기가 더 나빠지면 이들은 극도로 취약해질 것이다.

EU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경제들을 지원하고자 “경제회복기금”을 추켜세우며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늦은 것으로 드러날 듯하다. 유럽이 언제까지나 멀쩡해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5호 / 번역 김중환

프랑스,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투쟁?

무슬림 희생양 삼아 주의 돌리려는 마크롱

찰리 킴버

영국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가차없는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기 시작했다.

10월 2일 마크롱은 프랑스 내 “이슬람 분리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슬람을 가리켜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위기에 빠졌고 극단적 분파들 때문에 망가진 종교”라고 했다.

마크롱은 프랑스의 이슬람이 “외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모든 무슬림에게 낙인을 찍으려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마크롱의 정책은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며 그 자신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5개의 기둥에 빗대어, “[이슬람] 분리주의”에 맞서는 자신의 투쟁이 “다섯 개의 기둥”에 근거한다고 했다.

마크롱은 기존의 “중립 의무”를 모든 공공부문과 그 하청 노동자들로 확대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면 무슬림이 같은 무슬림을 우대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채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공항에 취업하려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정책에는 이슬람 교리를 따른다거나 세속주의 강령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는다고 의심되는 공동체 조직들을 해산하는 것도 포함됐다.

마크롱은 앞으로 도지사들이 지방 공무원들의 권한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컨대, 공립학교에서 [무슬림들을 위한 할랄 음식을 제공하도록 한 조치를 무로 돌릴 수 있다. 또한 “수영장에서 특정 시간대를 남성이나 여성 전용으로” 정한 조치도 무효화할 수 있다. [프랑스 우익은 수영장에 여성 전용 시간대를 마련하는 것이 이슬람 탓이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법은 의학적 사유가 있지 않

는 한 홈스쿨링을 금지하고 3세 이상 모든 아동은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받도록 강제한다. 그럼으로써 “극단주의자들”의 “세뇌” 시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학교는 “신도가 아니라 시민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마크롱은 말했다.

그러나 새 법은 예컨대, 알자스-모젤 지방의 교육 방식은 문제 삼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가톨릭·개신교·유대교 성직자들이 국가에게서 재정을 지원받고, 아이들은 공립학교에서 해당 종교 대표들이 가르치는 종교 수업을 들어야 한다.

공격

이번 이슬람 혐오를 통해 마크롱은 코로나19 대처 실패와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 또한 마린 르펜이 이끄는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행진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서 일부 표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나 마크롱이 한 그런 연설은 도리어 더 강력한 인종차별적 요구로 이

어질 뿐이다.

국민행진은 “일부 정책들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재빨리 이렇게 덧붙였다. “[이슬람] 공동체주의를 배양하는 대규모 이주, 이데올로기 금지의 필요성, 분리주의자의 국적을 박탈하기 위해 필요한 국적법 개혁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런 요소들을 입법 과정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인 반자본주의신당(NPA)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런 국가 주도 이슬람 혐오를 규탄하고 그에 반대하는 모든 행동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는 차별을 강화하고 무슬림을 공격하는 조치에 반대하고, 정부 의도대로 우리가 분열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부는 부자들을 섬기며 나날이 극우를 위해 길을 닦고 있다.”

주류 좌파인 사회당은 안이하게도 마크롱이 모든 무슬림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서 기쁘다며 빈곤 문제 해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내년 대선에서 좌파의 주요 주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은 장뤼크 멜랑송은 마크롱 연설의 “위선과 악독함”을 비난했다. 그의 정당인 좌파당이 어떻게 반대하고 나설지는 여전히 두고 볼 일이다.

마크롱의 이슬람 혐오 정책은 수십년간 누적된 비슷한 정책들의 연장선 위에 있는데, 모든 거대 정당들이 여기에 가담하고 좌파들은 너무나도 자주 이를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지지했다.

이번 공격은 정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지배계급들이 인종차별과 희생양 삼기로 반대파를 분열시키려 든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노란조끼 운동, 노동조합, 인종차별 반대 운동, 기후위기 운동, 여성 운동의 모든 이들이 이슬람 혐오에 맞서 싸워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5호 / 번역 김중환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김성보 마장중학교 교사

추석 연휴가 지나고 교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교육부가 또다시 언론을 통해 각 학교에 변경된 수업 방식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에 정상적인 개학이 어렵다는 것은 교사들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3월 내내 언론을 통해 휴업 명령만 내릴 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제대로 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3월 말에 급작스레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발표하자 교직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한 학년만 접속해도 버벅거리는 e학습터와 EBS 교육방송의 협조 정도만 준비한 채 개별 학교에 온라인으로 개학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한국의 교육 과정은 대면 수업에 맞춰져 있다. 전국의 교사 어느 누구도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 때 각도기를 써서 그려 보며 '각'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데, 이를 온라인 수업으로 하려면 학생들에게 각도기를 하나씩 마련하게 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크



정부는 제대로 된 지원도 없이 교직원들에게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4월 9일 온라인 수업 중인 서울의 한 고등학교

다. 교육 과정을 바꾼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교과서를 새로 쓴다'는 것인데, 국가적으로 3~4년은 준비해야 가능한 일이다.

교육부가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온라인 수업을 명령했기 때문에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을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한 임기응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5월 초에 교육부는 또다시 별 준비 없이 등교를 명령했다. 온라인 수업을 하느라 PD, 크리에이터, 콜센터 구실을 동시에 해야 했던 교사들에게 방역 전문가가 구실이 더해졌다. 2주 단위로 찢끔찢끔 온라인 수업 연장을 명령하는 바람에 일선 학교들은 온라인 수

업도, 대면 수업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는데, 이제 마스크 두 장 나눠 주고는 방역 전문가가 되라고 명령한 것이다.

방역 지침을 따르자면 한 교실에는 학생이 16명 정도만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의 현실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정한 '학급당 학생 수 35명 이하'가 기준이다. 등교한 학생들은 친구와 대화를 하지도, 물을 마시지도 못했다. 게다가 3주 만에 등교하니 밀린 시험을 미친 듯이 봐야 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임기응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학습 격차가 커지는 것도 큰 문제다. 가정 내에서 돌봄이 부족한 경우 온라인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늦잠을 자거나 모니터 앞에서 잠시 한눈을 파는 등 사소한 사례도 있지만 가끔 아동 학대 수준의 '방치'도 있다. 스마트 기기가 없거나 무선 데이터가 부족해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해도 내용을 제대로 못 보는 학생도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교사들은 올해 학습 결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한다.

교육부는 학습 격차를 완화해야 한

다며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지시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출석시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쌍방향 수업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교육부는 임기응변으로 온라인 수업이나 등교냐를 결정하면서 학사 일정을 채우려고만 할 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도록 사람과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은 교사가 하더라도 영상·방송 기기와 프로그램을 다룰 직원이 필요하다. 원격으로 학생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찾아갈 돌봄 노동자도 필요하다. 제대로 된 학습 지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적절한 스마트 기기와 무선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가 잦아들었을 때 등교 수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작은 학교 통합합 정책을 폐기하고, 학교의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즉, 오랫동안 요구돼 온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교직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옵티머스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원 의혹

여권 중심부도 우파 야당처럼 부패했는가?

김문성

최소 수천억 원 금융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총선 선거 사무소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 10월 6일 SBS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옵티머스의 자회사 격인 트러스트올은 올해 2~5월 이낙연의 종로 총선 선거 사무실(당선 후에도 지역 사무실로 쓰는)의 제록스 복합기(복사, 출력)를 대신 대여해 주고 넉달치 요금을 내 줬다.

이낙연 측은 즉각 지원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만 실무진의 사소한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현행 선거법은 어떤 형태로든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한다).

옵티머스 사건은 펀드 모집 단계에서부터 계획적으로 꾸미진 대형 사기였다.

대표이사 등이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며 시중 은행에서 펀드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인 돈이 무자본 인수합병이나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투자됐다가 사라졌다.

빼돌린 자금의 '저수지'로 의심되는 회사가 바로 트러스트올이다. 따라서 이번

보도에서 드러난 지원 액수는 적지만, 대형 금융 사기 사건들과 집권당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과정이 연결돼 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이낙연의 정치적 위상 때문에 더욱 그렇다.

옵티머스 관련 여러 회사들에는 이모 변호사(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었음)가 대주주로 올라가 있다. 이모 변호사의 남편은 주범급 혐의로 구속돼 있는 윤모 변호사이다.

윤모 씨와 함께 구속된 현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과 미국 도피 중인 전 대표 이혁진 모두 한양대 운동권 출신으로, 전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 이혁진은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도 출마한 적이 있고, 옵티머스 대표 시절 전후로 회삿돈을 수년간 횡령한 혐의로 수배돼 해외 도피 중이다. 그는 해외 도피 중에 대통령 해외 순방 행사에 나타나서 권력층의 비호를 받는다는 의혹을 샀다. 그때 대통령비서실장이 임종석이었다.

불법 정치자금

옵티머스 사건의 최대 관심사는 사기로 모은 돈이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이다.

이 때문에 이낙연 후원 의혹이 심상치 않은 것이다. 이낙연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국무총리였고, 총선(서울 종로) 당선 확률도 높았고, 이후 민주당 당대표나 유력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므로 그런 이낙연에게 과연 소액만 후원했을까, 이낙연뿐 아니라 다른 여러 정치인들에게도 비슷한 후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추미에 휘하의 검찰이 정치자금 유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것 같지는 않다.

집권당의 불법 정치자금 통로로 의심받는 라임펀드,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인물들이 연루됐다(1명은 이미 구속).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와 관련해, 최근 공중파 방송들과 친정부 검찰 측이 짜고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우파 언론의 겸·언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여권 인사들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가 번지는 걸 미리 막아 보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알았거나 심지어 지시했

느냐가 쟁점일 것이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이 사실상 멈춰 있다.

추미애의 연이은 검찰 인사로 관련 사건들에 열의 있는 수사 인력이나 수사를 독립적으로 지휘할 간부들이 대거 좌천되고 흩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한 반면,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레이덤 방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여 년 동안 조국, 추미애, 윤미향 등을 편들고 보호하려 해 왔다. 검찰총장인 윤석열과 그 검찰 라인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여권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에 관한 수사를 방해했다.

어떻게 해서든 레이덤(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막겠다는 의지의 발로였다. 그래야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이 최근 길들여진 듯이 보이자, 정작 '검찰 개혁' 명분으로 내세운 검찰 수사권을 별로 약화시키지 않았다. 그러자 현 정부와 줄곧 밀월 관계로 지내 온 경찰이 반발했다. 그럼에도 공통 기관인 경찰의 권한은 강화됐다. 노동계급 운동은 경찰 권력 강화를 지지할 수 없다.

최근 지지율 하락 위기의 핵심은 개

혁을 바라던 지지층 일부가 여권이 개혁은커녕 자기 편 비리와 특권 감싸기에만 열중하는 것에 질려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상황이 여권 핵심부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번 비리 폭로가 그 방증이다.

올해 추석 특집 KBS 여론조사는 최근 늘어난 무당층이 정치에 매우 관심이 높으면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 평균보다 더 비판적이라고 밝혔다. 우파는 싫지만 진보나 좌파에서는 대안을 찾지 못하는 정치적 부유층이 커졌다는 뜻이다.(아마도 강력한 노동계급 투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일 것이다.)

이런 시기에 노동·진보 진영의 온건한 지도부들이 민주당의 실정을 보아넘기는 것(그래도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심정으로)은 좋지 않다. 단지 몇몇 입법 정책에서 차별화하겠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분노하고 답답한 대중에게 진정한 진보적 선택지가 힘 있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오히려(전통적 우파이든 그 변형태이든) 우파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작업장, 대학, 지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경쟁자들을 만들고 교육하고 토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

전공의는 (신)중간계급인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전제를 살펴봄

장호중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의 기관지인 <변혁정치>는 최근 호(114호)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인터뷰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충 정책과 이에 크게 반발한 전공의들의 파업을 다뤘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이하 직함 생략)은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혀 온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속시원히 폭로했다. 진정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병원을 늘리고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형준은 전공의들의 파업을 비판하며 의사들을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사 사회”)으로 규정한다. 그리고는 전공의들의 이해관계가 본질적으로 노동계급과 대립하는 것처럼 설명했다. 심지어 그는 전공의들이 우승열패 논리에 찌든 “기득권 엘리트”이며 이번 파업이 “전형적인 반동”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본지는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살펴본다 - 전문직은 특정 계급인가?’(김하영, <노동자 연대> 336호)에서 밝힌 것처럼 계급은 직업과 같지 않고, 의사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보서는 안 되고, 전공의는 노동계급의 일부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추정컨대, 정형준이 전공의들에 대해 그토록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그가 전공의들을 노동계급의 일부가 아니라고 여기는 데에서 비롯한 듯하다. 그는 다른 자리에서 전공의들이 신중간계급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은 간호사, 의료직, 의료지원인력, 행정직에게 ‘오더(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 그가 맨 근거이다.

신중간계급의 정의와 성격

신중간계급은 무엇인가? 구중간계급이 자본주의 이전 사회부터 존재한 중간계급인 데 반해 신중간계급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중간계급을 말한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의 축적이 전개됐다. 이에 따라 자본가가 예전처럼 생산을 직접 감독·통제하는 일이 불가능해졌고, 이 업무 중 상당 부분을 피고용인 일부에게 위임해야 했다. 이처럼 피고용인이면서도 자본가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은 관료적으로 위계화돼 있는데 그중에서 최상층 관료(이들은 자본가 계급의 일부이다)를 제외한 사람들을 신중간계급이라고 한다.

신중간계급은 자본주의 생산 과정 내부에서 생겨났다는 점에서 자영농 등 전통적(“구”) 중간계급과 구별된다. 그리고 지배계급 자신과도 구별된다(두 가지 점에서).

첫째, 지배계급 자신은 ‘전략적’ 통제



자본주의의 발전과 의료 '산업'의 성장 속에서 의사의 계급적 구성도 변하고 있다

권, 즉 자본 투자를 결정하거나 철수시킬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신중간계급은 이미 배치된 자원들의 일상적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둘째, 지배계급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위를 얻는다. 그들에게 임명이나 진급 같은 절차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중간계급은 지배계급으로부터 지위를 부여받는다.

신중간계급은 임금노동자들과도 구별된다. 신중간계급은 생산 과정과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부분적으로 자신의 노동도 통제한다. 물론 그들 자신도 피고용인이라는 점에서 온전한 자율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신중간계급은 또한 그들의 노동력 가치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 그들이 얻는 소득의 상당부분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분배받은 것이다. 반면 임금노동자들은 잉여가치를 착취당한다. 그들의 임금이 아무리 많아 보일지라도 임금(노동력 가치)보다 더 많이 일하므로 자본가들은 이로부터 잉여가치를 가져간다.

그런데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신중간계급이라는 개념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적했다. “신중간계급은 부르주아지 또는 프롤레타리아트가 하나의 계급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에서 하나의 계급이 아니다. [신중간계급은] 자본과 임금노동 사이의 근본적 모순과 관련해 애매하고 어중간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잡다한 사회계층의 집합이다.”

또한 관료제적 위계체계의 꼭대기에서 이 계급은 경영직 자본가 계급으로

넘어 들어가고 바닥에서는 화이트칼라 노동자 계급으로 넘어 들어간다.

신중간계급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사회주의 정치에 유용하다. 마르크스의 계급 개념을 훼손하지 않고도 오늘날 비교적 복잡해진 계급 관계들을 분석할 수 있게 해 주고, 실천적 문제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거둬서 발견한 것은, 이 고위직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직책을 맡았을 때, 그것을 다른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에 어떤 경영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이었다.”(크리스 하먼) 따라서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포괄하려 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전공의의 계급 분석

그렇다면, 전공의를 신중간계급으로 볼 수 있을까? 첫째, 전공의들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하는 ‘지시’의 대부분은 환자에게 줘야 할 약물과 처치에 관한 것으로 분업의 일환이다. 병원뿐 아니라 고도로 분업화된 오늘날의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분업의 일환으로서 지시가 이뤄진다. 이들의 지시는 대학병원의 병원장, 실장, 부장, 과장, 수간호사 등 관리자들이 하는 감독·통제와는 구별된다. 권위주의적 위계 체계가 강하게 남아 있는 곳에서는 전공의 일부가 관리자의 업무를 일부 대신하기도 하지만, 일시적이거나 사라져 가는 잔재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

병원에서 전공의가 다른 노동자에게 이런 지시를 하려 했다가는 코웃음을 살 것이다. 전공의 수련 방식이 체계화되면서 심지어 직속 후배 전공의에게 끼치는 영향도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다. 전공의들은 타인은커녕 자신의 노동과정도 통제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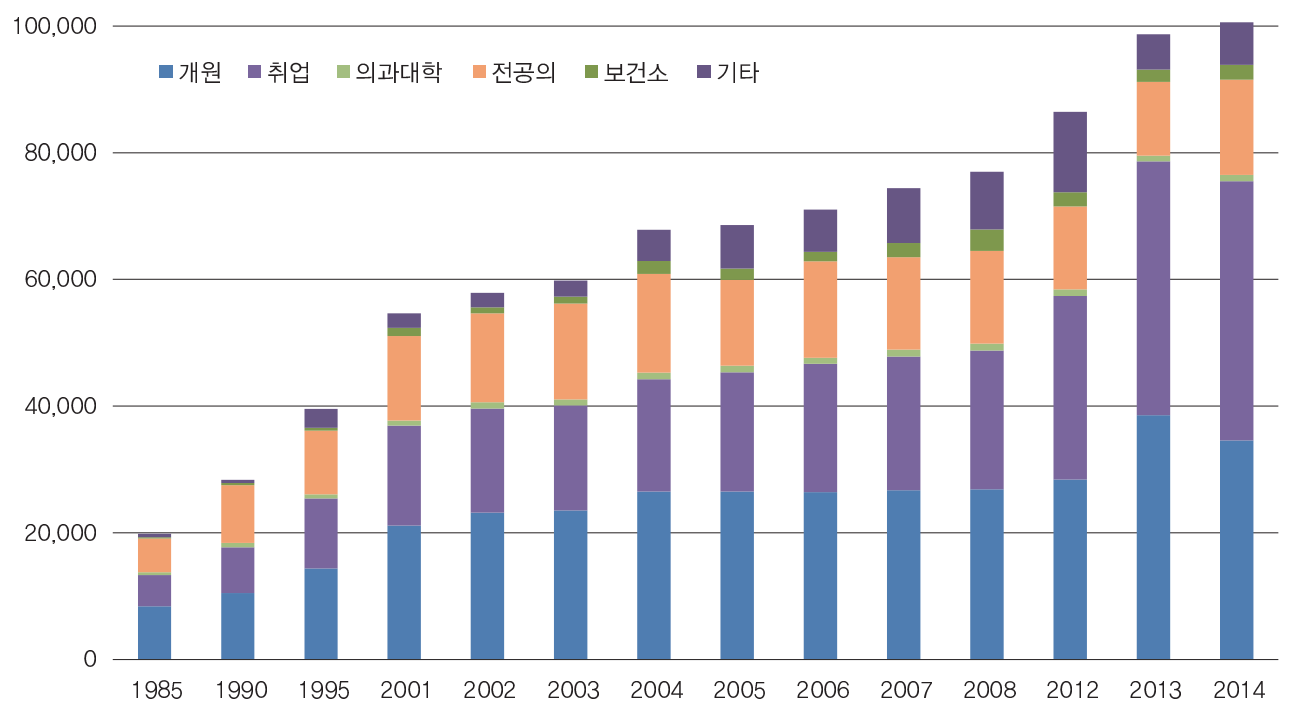
둘째,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한 잉여가치 일부를 분배받는다고 볼 수도 없다. 전공의들의 임금은 병원 내의 다른 노동자들과 단순히 비교해 보더라도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의사를 양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춰 봐도 잉여가치의 일부가 이전된다고 의심할 여지는 거의 없다. 임금 등 노동조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지만 이로부터 그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노동자들은 전공의를 말고도 많다.

마지막으로, 다른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보면, 전공의들의 계급의식이 미발전 상태여서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로부터 우호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식의 문제를 제쳐놓고 객관적 조건을 보면, 전공의들은 사용자들에 대해 다른 병원 노동자들과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다. 업무 분장을 두고 간호사 등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 다른 많은 노동자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전공의에게 악조건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면 간호사에게 그러기도 쉽다. 반면 전공의들과 간호사들이 단결해 사용자에게 맞선다면 공동의 이익을 쟁취하는 데 훨씬 유리해진다. 간호사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이 개선되면 전공의들도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기가 유리해진다.

물론 전공의들은 4~5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개인적 조건과 성적 등에 따라 그 계급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수련 과정에 있는 그들이 병원 사용자에게 고용돼 착취당하고 있다는 현재의 계급 관계를 부인할 수

취업 형태별 취업자수 추이 (출처: ‘2014 전국회원실태조사보고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의과대학’은 환자 진료를 하지 않고 기초의학(해부학, 생화학 등)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뜻한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있어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

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 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갓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김예나

계급은 의식이 아니라 생산수단과 맺는 '객관적' 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는 없다. 전공의들의 미래 계급 지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전공의를 마친 뒤에도 노동자로 남는다.

정형준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의사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지는 않는 듯하다. 그러나 의사 수의 증가와 병원의 대형화는 의사들의 내부적 구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85~2014년 사이에 전체 의사 수는 5배로 늘었다. 그 사이에 취업한 의사 수는 8배로 늘어난 반면, 개원의는 4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1985년에 개원의 숫자는 봉직의(취업)의 갑절이었지만, 지금은 봉직의가 더 많다. 만성화된 경제 불황은 개업의 문을 더욱 좁히고 있다.

봉직의에는 대학병원의 교수들과 그 아래 부교수, 전임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어지간한 중소병원의 의사들도 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봉직의다. 이들 중 일부는 병원 경영과 관련된 관리 업무를 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그저 환자 진료를 할 뿐이다. 이들은 대개 개원의에 비하면 소득이 한참 적다. 사업소득과 관리자로서의 추가보수를 포기한 결과다.

봉직의 중 매우 적은 수는 자본가가 된다. 적지 않은 수는 신중간계급, 즉 직접 진료도 하지만 병원 운영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일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

신중간계급으로 분류되는 의사들 내에서도 계층화가 진행돼 상층의 일부는 좀 더 고위직의 관리자로, 일부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진료만 하는 의사들로 나뉘고 있다. 관리나 노동통제와는 관계없이 순전히 진료 업무만 하는 의사들도 많다(이들은 대부분 노동자에 속한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도 더욱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2014년에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후 진료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원하겠다는 답변은 11.6퍼센트에 그친 반면, 취업하겠다는 응답

은 52.9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는 기존 개원의와 봉직의 비율(34.4퍼센트 대 40.7퍼센트)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는 수치로, 장차 봉직의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의사 노동자도 늘어날 것이고,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차지하는 지위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들의 계급의식 미발전 상태를 지적하지만 말고 장차 사용자에 맞서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지키는 데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공의들뿐 아니라 다른 병원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토대와 의식

정형준은 자본주의 사회 생산관계들의 변화하는 현실과 이에 따른 변화의 잠재력을 보기보다 의사라는 직종을 정태적으로 바라보며 일종의宿命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잠시 노동계급의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내 중간계급이 되거나 설사 노동계급의 처지에 있을지라도 소득 수준이 높아 계급의식이 발전할 수 없다고 여기는 듯하다.

물론 이번에 전공의들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한 것은 공공의로 확대라는 방향에 역행하고 따라서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요구를 지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들의 요구와 행동은 동료 노동자들을 배척하거나 처지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정부 정책이 대단한 개혁이라도 돼서 다수 노동자들의 바람을 짓궂개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정형준 스스로가 공공의료 강화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이주노동자 고용에 반대하는 일부 건설 노동자들에 비해, 전공의들의 이

런 요구와 행동이 특별히 더 '반동적'이라고 봐야 할까?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은 이처럼 직접적으로 동료 노동자들을 배척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좀 더 날카로운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실 노동자들이 잘못된 요구를 내놓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의식을 제대로 계급을 규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에릭 홉스봄처럼 노동계급의 규모와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결론으로 나아가기도 쉽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잘못된 요구가 그들의 존재조건에서 비롯한 필연적 결과이기는커녕 지배계급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기 위한 이간질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진정한 계급적 이익을 추구할 것을 인내심을 갖고 설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극소수이더라도 계급의식적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전체 지형을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반대로 전공의들(과 심지어 의대생들 전체)을 다른 모든 의사들과 싸잡아 기득권이라고 비난해서는 사실상 노동계급 분열과 반목을 부추기는 효과를 낼 뿐이다.

정형준은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화”를 비판하고 노동계급의 독립적 투쟁을 얘기했지만, 의사 가운데 노동계급에 속하는 부문의 조건과 그 사회적 구성에 민감하지 못한 채 계급투쟁에 대해 말한들 어디에서 번지수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 참고도서 : 《노동자 계급에게 안녕을 말해야 할 때인가》(알렉스 캘리니코스, 크리스 하먼 지음, 책길피)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기후 재난과 자본주의**



미국 대선

극우 운동 부추기며 판돈 키우는 트럼프

김준호

코로나19에 걸려도 도널드 트럼프의 뻘뻘함과 해악은 줄어들 줄 모른다. 10월 6일 트럼프는 퇴원을 앞두고 있다며 의기양양해하는 글을 트위터에 썼다. “코로나를 무시워 말라. 코로나에 삶을 지배당해선 안 된다.”

증세가 나타나기 무섭게 전용 헬기를 타고 방 여섯 개 팔린 전용 병동으로 긴급 후송됐고, 전담의 12명이 붙어서 의약품을 물 쓰듯 썼으며, 앓는 동안 일자리도 생계도 위협받지 않은 자가 할 말은 아니다.

10월 6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1만 5000명을 넘어섰다. 누적 확진자는 약 770만 명에 이른다.

백악관은 트럼프 발 감염 경로를 추적하지 않겠다고 했고, 오히려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을 방역 완화 및 경제 재가동을 밀어붙일 기회로 삼고 있다.

트럼프 선거운동본부 선임고문 스티브 코르테스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각각 <폭스뉴스>·<CBS>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감염된 것을 보면 아무리 봉쇄를 해도 바이러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며, 방역을 완화하고 경제를 재가동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자본주의의 수익성 위기로 점점 더 커진 불안감의 표현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그나마 괜찮아 보였던 경제 지표에 기대어 재선하려 했고, 이 때문에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고도 두 달 가까이 은폐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2000년대 후반 하락세로 접어든 미국 자본주의의 이윤율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계속 하락했고, 올해에는 급전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는 대기업 구제를 위해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수익성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채 문제가 더해졌다.

그 피해는 특히 서민층을 강타하

고 있다. 10월 2일 미국 노동통계청은 2019년 2월 이후 실업 건수의 4분의 3이 팬데믹 이후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공식 통계로도 약 1300만 명이 실업 상태인데, 구직 포기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실업자 수는 그 곱절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방역을 더 한층 완화한다면 이는 노동자·서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특히 필수 업무 종사자 비율이 높은 유색인종 노동계급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파탄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책임을 떠돌리고 지지층의 이반을 막으려고 ‘중국산 바이러스 별 것 아니니 경제 재가동하자’는 위험천만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극우 고무하기

트럼프는 특히 인종차별적 우익을 고무해 상황을 돌파하고 권력을 이어가려 한다. 그래서 트럼프는 “법질서 확립”을 외치며 ‘남부 전략’을 휘둘렀고, 한술 더 떠 극우 운동을 적극 고무했다.

이를 노골적으로 보여 준 두 사건이 일주일 새 벌어졌다. 하나는 트럼프가 10월 4일에 코로나 치료 중 격리 방침을 어기고 병원을 나가 극우 시위대에 손을 흔들어 준 일이다.(트럼프와 같은 차에 탔던 경호원 두 명은 바이러스에 노출돼 격리됐다.)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을 기원하며 모여든 극우들에게 자신이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이다.

다른 사건은 훨씬 의미심장하다. 바이든과 1차 대선 후보 TV 토론 때 트럼프가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즈’에 직접 행동 지침을 내린 일이다. “프라우트 보이즈, 물러서서 대기하라.”

넬리 보도된 이 말 바로 다음에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좌파이지 우파가 아니다.” 같은 토론에서 트럼프는 다시금 “안티파와 아나키스트”를 명분 삼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을 비난했고 “법질서 회복”을 연거푸 부르짖었다.

트럼프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문제를 일으킬” 때를 노리며 “대기하라”고 극우 운동에 지시한 것이다. 의기양양해진 ‘프라우드 보이즈’는 “물러서서 대기하라”는 구호를 인쇄한 티셔츠 10만 장을 주문했다. ‘프라우드 보이즈’ 리더 개빈 맥키네스는 토론 직

후 언론 인터뷰에서, 일단 “물러서서 대기”하겠지만 “전국적으로 폭력 시위가 계속되면 도시를 불태우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러댔다.

트럼프는 극우를 고무하면서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사람들의 권리도 더 공격하려 한다. 트럼프가 연방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후임 지명을 서두르는 것도 (일차적 목표는 선거적 득실이겠지만) 마찬가지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일치 단결해 미는 후보자에 이미 코니 배럿은 여성의 낙태권 철폐, 이주 규제 강화라는 기독교 우파의 어젠다와 보편 복지 삭감이라는 공화당의 전략을 신봉한다.

트럼프 자신은 파시스트도 아니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일체의 파괴를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트럼프가 일차적으로 대통령직 유지를 노리고 하는 이런 일이 ‘대안 우파’ 같은 신흥 우익 운동, 그 자신이 일으킨 강경 우익 운동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 ‘프라우드 보이즈’·‘애국기 도회’ 등 극우 조직들, 복음주의 개신교 우파 운동 등을 모조리 고무하고 있다.

트럼프가 11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미국과 세계 노동계급이 심각하게 경계해야 할 ‘유산’이 남게 될 것이다.(당장 11월 3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심각한 논란과 쟁투가 바로 뒤이을 것이다.) 세계 최강 자본주의 국가의 한복판에서 극우와 파시즘의 토양을 일구는 트럼프에 철저히 맞서야 할 이유다.

민주당?

하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은 대중이 보기에 트럼프에 대항할 매력적인 대안이 못 된다. 그는 미국 지배계급 정당인 민주당의 계급 기반에 걸맞게 행동하고 있다.

바이든은 자신의 친기업 성향을 숨기려 들지도 않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뒀다. 바이든은 운동의 “폭력성”을 비난하며 (트럼프를 따라) “법질서 확립”을 앞세웠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요구에 한사코 반대하는 카멀라 해리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바이든은 인종차별 철폐 연원에 재를 뿌리고 우파에 호의적 눈짓을 보내 “중도표”를 잡으려 하는 듯하다. TV 토론에서도 바이든은 “법질서를 존중하는 평화 시위”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며 또다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을 비난했다. 바이든은 대선 전에 연방대

법관을 인준하지 말자면서도 “배럿 후보는 여러 모로 참 좋은 분”이라고 했다.

트럼프에 질려 바이든에 투표하겠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든의 정책이나 후보자 면면에 대한 지지가 한 자릿수대인 것도 당연지사다.

2004년 대선 때도 그랬다. 당시 민주당 후보 존 케리는 역대 최악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던 공화당 대통령 조지 W 부시와 경합했다. 케리는 미국과 세계를 휩쓸던 반전 운동의 염원에 조응하기는커녕, 외려 자신이 부시보다 이라크 전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나섰다. 케리는 큰 표차로 낙선했고 부시는 기사화생해 이라크를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버니 샌더스가 “바이든-해리스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진 친서민·친노동 후보” 운운하며 선거 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미국 민주사회당(DSA)이 이미 바이든 지지 거부를 결정해 놓고도 지금 와서 민주당과의 공조 문제를 두고 내홍에 빠져 있는 것도 문제다.

미국 대중은 민주당의 선거 득실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2004년 대선 당시 적잖은 반전 운동가들이 도저히 지지하기 힘든 후보였던 케리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선거 패배 후 운동 자체가 분열해 타격을 입었음을 유념할 만하다.) 그래야 트럼프와 그가 대변하는 체제의 온갖 오물과 폐악들에 맞설 수 있다. 여름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지배자들을 겁에 질리게 하고 정국을 주도했던 것을 보면,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관련 기사: 본지 335호 ‘반란의 미국: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어떻게 트럼프를 패배시킬 것인가?’)

그런 점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경찰에 의해 살해된 흑인 여성 브리온나 테일러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며 9월 하순에 다시 분출한 것은 좋은 징후다. 오리건주(州) 포틀랜드에서는 대규모 연대 행동으로 극우 ‘프라우트 보이즈’의 콧대를 납작하게 누르기도 했다.(7면 기사를 보시오.)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힘을 발휘해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 노동자들은 팬데믹 하에서도 투쟁할 수 있음을 거듭 보여 주고 있는데, 미국 인터넷 언론 <페이데이 리포트>는 미국에서 3월 초부터 약 반 년 새 비공인 파업이 약 1000건 이상 벌어졌다고 추산했다.

의미심장하게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발발을 기점으로 파업 건수가 세 배 가까이 늘었다(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60건, 6월 1일부터 9월 초까지 약 750건). 특히 거리 시위가 수백만 명 단위로 치솟던 6월 첫 두 주 동안만 비공인 파업이 약 600건 벌어졌다고 <페이데이 리포트>는 추산했다.

강력한 대중 항쟁이 다른 운동들을 고무한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운동들이 극우에 맞서, 중첩된 위기에 맞서, 고통 전가와 차별·천대 일체에 맞서 계속 단호하게 전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투쟁을 흔들림 없이 건설할 혁명적 정치와 조직을 운동 내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노동자연대 공개 온라인 토론회

미국 대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 트럼프 재선? 선거 불복?

일시: 10월 12일(월) 오후 8시
발제: 김준호 (노동자 연대) 기자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참여 방법: 유튜브 “노동자연대TV” 채널,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페이지

용어설명

남부 전략

1968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 리처드 닉슨이 흑인 평등권 운동에 맞서 사용해서 유명해진 선거 전략. 당시 닉슨은 유색인종을 “범죄자”이자 “복지 사기꾼”으로 몰며 “백인들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종차별 반대 조처들이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